

# 숨진 60대 용인 교사, 학부모에 '합의 요청' 전화수차례 걸었다

### 경찰, 숨진 교사 휴대전화 포렌식 결과 수차례 통화 시도 확인해 고소 관련 합의 내용으로 전해져...아직 사망 관련 원인 특정 불가

학생 측으로부터 고소당해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다가 숨진 경기 용인시 소재 고등학교 체육교사가 사망 전 학부모에게 수차례 전화를 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11일 경기남부경찰청에 따르면 숨진 A(61)씨 휴대전화 디지털포렌식 결과 A씨는 8월 하순께까지 자신을 고소한 학부모에

게 여러 번 전화를 걸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통화는 일부만 연결됐으며 고소 관련 합의를 요청하는 내용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지난 3일 오전 10시 35분께 성남시 분당구 운중동 청계산 등산로에서 A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체육교사인 A씨는 지난 6월 체육 수업 시간 자리를 비운 사이 학생 간 발생한 사고로 고소당한 상태였다.

당시 B양이 다른 학생이 찬 공에 맞아 다쳤고, B양 측은 A씨와 가해 학생을 과실치상 등 혐의로 7월 초 용인동부경찰서에 고소했다.

이 사건 관련 B양은 진료 확인서 등 제출과 함께 8월 초 경찰 피해자 조사를 받았고, A씨와 가해 학생은 일정을 조율하고 있었다.

특히 A씨는 이 사건 관련 경찰에 출석 일정을 조율하면서 고소장을 보고 변호인과 상의하고 싶다는 취지 말도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A씨는 정보공개청구 절차를 밟아 8월 말 B양 측이 낸 고소장을 확인했다.

학교에서는 이 문제와 관련해 A씨에 대해 '경고' 처분을 내렸다. 그러나 피해 학생 측

은 이 처분이 부족하다며 교육청에 A씨에 대한 감사와 징계를 요청, 교육청이 해당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했다.

경찰은 과도한 민원 등이 사망에 영향을 미쳤는지 등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학부모와 교육청 관계자 등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면서 휴대전화 포렌식 결과에 대해 분석하고 있다"며 "아직 구체적 사망 원인으로 특정할 수 있는 내용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오유나기자



지진 대응 안전체험하는 어린이들  
안전체험을 하고 있다.

지진 안전주간 첫날인 11일 경기도 화성시 향남면 화성시민안전체험센터에서 어린이들이 지진 대응

## 광주·전남 조합장선거사범 301명 입건·154명 기소

### 당선자 17명도 재판 넘겨져...금품선거 사범 212명 최다

광주·전남에서 제3회 3·8 농협·수협·산림조합 전국동시조합장 선거와 관련해 검찰에 입건된 301명 중 154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광주지검은 지난 3월 치러진 3회 조합장선거와 관련해 입건한 301명(목포·순천·장흥지청 포함) 중 154명을 기소(구속기소 6명, 불구속 기소 148명)했다고 11일 밝혔다.

재판에 넘겨진 154명 중 17명은 조합장 선거 당선자다. 17명 중 1명은 구속기소, 16명은 불구속기소 됐다.

광주·전남 3회 조합장 선거사범 입건자(301

명)는 2회 조합장 선거(238명)와 비교하면 26.5% 늘었다. 이번 3회 선거사범 유형은 금품선거 사범이 212명(70.4%)으로 가장 많았다. 흑색선전 사범 31명(10.3%), 기타 58명(19.3%) 순이다. 2회 조합장 선거 당시 금품선거 사범 비율은 68.5%, 흑색선전 사범은 16.8%였다.

이번 3회 조합장 선거에서 구속 기소된 6명 모두 금품선거 사범이었다.

실제 농협 조합장 선거 당선자 A씨는 측근과 함께 조합원 20명과 마을 이장에게 1735만 원을 제공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당선자 B씨는 농협 비상임이사와 공모해 조합원 116명에게 324만 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하고, 일부 조합원에게 불법 선거조직에 가담할 것을 권유하면서 현금을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밖에 경쟁 후보 조합장을 낙선시킬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적은 유인물을 우편 발송한 조합원과 선거운동 기간 전 조합원들을 찾아 지지를 호소한 낙선자 등이 불구속 기소 됐다.

검찰 관계자는 "재판 중인 사건의 경우 신속하고 철저한 공소 유지를 통해 불법에 상응하는 형벌이 선고되도록 힘을 쏟겠다"고 강조했다. 서선욱기자

## 신당역 살인 1년...피해자 유족 "전주환 엄벌이 곧 위로"

### 2심서 무기징역 선고...대법 판결은 아직 "서울교통공사 상대로 민사소송 진행 중"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 1주기를 사흘 앞둔 11일 피해자 유족 측이 피의자 전주환(32)에 대한 엄벌을 촉구했다.

유족 측인 법률사무소 진서의 민고는 변호사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유족들은 고인이 된 피해자의 넋을 위로하는 길은 피고인(전주환)에 대한 엄벌이라고 생각한다"며 "이에 법원에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시민분들의 탄원서를 모집하며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대법원 선고로 피고인에게 2심에서 선고된 무기징역형이 확정된다면 스토킹 피해

를 당하는 수많은 피해자에게도 유의미한 판결이 될 것"이라고 했다.

또한 유족들은 전주환과 고인이 근무했던 서울교통공사를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소송 절차를 밟고 있다.

민 변호사는 "전주환에 대한 민사소송은 피해자의 생전 뜻이었기에 유족들이 피해자의 뜻을 이어 진행했고, 서울교통공사에 대한 민사소송은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하지 않았다는 점, 사용자로서 안전 보호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점을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있다"라고

전했다.

유족 측은 "법원의 판결로 서울교통공사의 책임이 도의적 책임을 넘어선 법률상 책임이라는 게 분명해진다면, 피해자의 직장 동료들도 안전한 공간에서 근무할 수 있게 되는 게 가장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신당역 스토킹 살인 전주환(32)이 지난해 9월14일 서울지하철 2호선 신당역 내부 여자 화장실에서 서울교통공사 입사 동기인 여성 직원 A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사건이다. 전주환은 A씨가 자신을 스토킹 등으로 고소해 재판에서 징역 9년을 구형받자, 양심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7월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 받은 전주환이 판결에 불복해 상고하면서 대법원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서선욱기자

# 신문인쇄 전문기업 (주)남도프린테크

(주)남도프린테크는 신문사 법인설립, 신문발행업 등록, 편집, 인쇄까지 토탈 서비스 가능한 업체입니다.

믿고 맡겨주시면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광주·전남 최초로 신문윤전판 출력시스템 도입
- 월등한 색상 구현력에 더러움 현상은 최소화!
- 최상의 인쇄 품질로 고객 만족을 실현하겠습니다

### (주)남도프린테크

광주광역시 광산구 평동로803번안길 93-10(용동) 평동산단 3번도로 끝  
Tel : 062)943-0135~6 Fax : 062)943-0134 담당자 : 010-2656-4747(장상문 전무)

